

# 정부 부처 단계 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도 지휘부, 국토부 핵심 인사 잇따라 방문

김관영 도지사, 국토부 제1차관 맞아 현안 반영 건의

임상규 행정부지사, 재정담당관 등 찾아 지원 요청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가 세종으로 총출동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부처를 방문해 막판 부처 설득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지휘부는 미온적 사업과 대규모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2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나란히 국토부를 방문

해 1차관 재정담당관, 철도국장을 찾았다. 새만금 핵심 기반 사업인 도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토부 제1차관을 만나 대통령 전북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실현을 위해 안정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비 및 공

사 착수에 필요한 2024년 사업비 715억 원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기본계획이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임 부지사는 부처예산 편성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재정담당관실을 찾아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인 도로·공항·철도 삼각축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내년도 사업비 지원 요청과 함께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 개선과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철도국장을 만나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비수도권 철도건설 사업을 통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추진 중인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단계 예산 반영에 중요한 분수령인 5월 중순부터 말까지 막판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실국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와 찾아 설명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막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시찰 내용 보고 적극 추진”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관련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국회에 출석해 시찰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시찰단이 검증해 보고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며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협의해 국민 대신

해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 출석시키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국민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떠났다. 시찰단이란 이름부터 국민 정서와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찰단 구성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나, 위험하나. 국민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며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와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스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후속 조치 전무”

도의회 예결특위,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식 전주)는 22일, 전북도 도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취약계층 전기 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세대 수 선정 기준을 물으며, 관련 예산의 목적·선정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집행해 줄 것과 전기취약 세대의 후속 조치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민중화 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민중화운동 공헌자 50명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범죄 예방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 전주시에만 지원되었던 것에 대해 질타하고, 앞으로는 14개 시군이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처리 저장장지 설치 문제에 대해 물으며, 이와 관련해 전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 등이 없다고 질타하는 한편, 한빛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창 군민과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도민안전실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시·군비 부담(30%)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자연재해 발생 위



“국립의전원 남원에 설립해야”

협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기부문화 정착과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됨을 지적했다. 또한 향교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계잡버리 국내 홍보사업비가 본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전원대학원 남원 설립을 촉구했다.

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2개월여 남은 지금에 와서 홍보하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이고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잡버리 참가비 지원사업에서 지도자와 운영요원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묻고, 홍보는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부금이 줄었다고 해서 답례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전북체육회 운영과 관련해 직원 채용 기준에 대해 묻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숙지 부족과 소극적인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전북도의 지도 감독과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앞으로 전북도와 체육회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계잡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잡버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목적에 대해 묻고, 국제적이며 전국 행사인데도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북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해야

민주 윤준병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는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수반·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도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가 주택 3만3,000~6만5,000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정책적·제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향후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영숙·최종윤·민병덕·김성환·서영교·조오섭·신정훈·위성곤·민행배·오영환·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